애물단지 지산유원지, 명소 부활 꿈 막혔다

한때 광주 대표 명소…1994년 사업자 부도 후 26년간 흉물 방치
토지소유자, 광주시 상대 소송… 민간 사업시행자 지정 무효 판결
호텔·컨벤션센터·수영장·짚라인 갖춘 복합유원지 조성 불투명

광주시가 지산유원지 조성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행정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아시아문화전당 관광 코스와 연계해 침체된 구도심 지역 경기 활성화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광주시와 동구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광주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무효"=광주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지산유원지 조성사업 일대 토지소유자인 H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에서 "광주시가 나경인터내셔날을 지산유원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H사는 광주시의 지산유원지 사업시행자 지정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대상 토지 3분의 2이상 소유 및 토지 소유자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 등이 지켜지지 않은 점을 내세워 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앞서, 나경개발은 광주시에 사업 대상 토지 전체 소유자 142명 중 72명의 동의서를 제출했고 광주시는 지난 2018년 3월, 지산유원지 일대 82만9250㎡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사업 시행자로 나경인터내셔널(나경개발)을 지정, 고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광주시의 시행자 지정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토지소유자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동의서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 나경개발이 제출한 72명의 동의서 중 52명의 경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거나 첨부된 인감증명서와 동의서의 인영(印影)의 육안으로도 일치하지 않아 소유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나경개발은 결국 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 중 20명의 유효한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광주시의 행정 처분은 관련법이 요구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광주시는 동의서 외관상 하자를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유효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춰 하자의 명백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언제쯤 달라질까=지역사회 안팎에서는 지산유원지와 연계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에서 광주시의 허술한 행정 때문에 26년 동안 도심 흉물로 전락한 '지산유원지'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산유원지는 지난 1978년 4월 문을 연 이래 호텔, 골프연습장, 모노레일, 유희시설, 각종 상가 등을 갖추면서 광주지역 명소로 자리잡았다. 70~80년대 소풍과 수학여행 뿐만 아니라 신혼여행객까지 찾는 대표 관광지였다.

하지만 1994년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호텔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유원지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도심속 흉물로 전락한 상태로 방치됐다.

동구가 지산유원지를 '랜드마크'(지역을 대표하거나 다른지역과 구별되는 지형 또는 시설물)로 만들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음악회, 커피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이곳에서 진행했지만, 낙후된 시설로 인해 예전의 명성을 회복하기는 힘들었다.

지난 2018년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나경인터내셔날(2003년 호텔, 유원지 부지 등을 인수)은 전체 93만여㎡ 중 급경사지 등 개발이 어려운 11만㎡를 제외한 82만9000㎡에 호텔, 컨벤션센터, 직업체험관, 수영장, 짚라인 등을 갖춘 복합유원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낸 바 있다.

사업계획서에는 바이킹 등 9종 유희시설 최신화 된 4D어드벤쳐 수영장 등 테마동 7종(VR게임장, 짚라인, 전시관, 천문대 등)으로 변경하고, 숙박시설 일부를 비지니스 호텔로 리모델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나경 측은 지산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일을 미루는 등 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게 동구 등 지자체들 설명이다.

동구는 지난 3월 광주시 요청으로 지산유원지 토지 소유자들의 명의 신탁여부를 조사한 결과,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소유자가 32명에 달한 사실을 확인해 동부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동구 관계자는 "지산유원지가 동구 관광활성화의 중추적 요소 중 하나"라며 "적극적인 개발 의지를 가진 민간사업체가 시행자로 나선다면 행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방암환자 검진 소홀 사망 대학병원 의사 1심서 무죄

유방암 환자의 재발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 등을 소홀히 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의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대학병원 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유방암 판정을 받고 유방보존술을 받은 환자의 주치의로, 지난 2010년 수술 이후 외래 진료 과정에서 호소하는 환자의 이상증상 및 유방종양 검사결과 등을 고려, 유방MRI나 조직검사 등 검진을 통해 원인을 알아내 적절한 치료방법을 강구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해 환자가 숨진 데 따른 업무상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환자는 유방암 1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항암·방사선·표적 치료 등을 받고 2013년부터 정기적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상 증상을 호소했다. 지난 2014년 '유방MRI 또는 조직검사를 통한 확진을 요함', '양성 병변이 더 의심되나 재발된 악성종양도 의심할 수 있음', '추적 검사를 추천함' 등의 흉부 CT나 유방종양스캔검사결과 등도 받았다.

A씨는 판독결과 이후 유방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뒤 재발이 확인되지 않자 유방MRI 등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또 이상 증상을 느끼고 정기검진일이 아닌데 찾아온 환자를 대상으로 다시 유방초음파검사를 실시했지만 유방암 재발은 확인되지 않았다. 환자는 그러나 지난 2015년 유방암 재발이 확인됐고 전이돼 치료 중 2017년 숨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유방암 재발 발견 및 치료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진료상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료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산사태 위험지역에 태양광시설 마구 설치
재해위험성 없다고 판정한 급경사지 붕괴

광주시·전남도 안일한 산림행정

산사태 위험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마구 설치하는가 하면, 집중호우로 무너질 정도로 관리가 시급한 급경사지를 '재해위험성이 없는 곳으로 판정하는 등 광주시와 전남도의 안일한 산림행정이 국정감사 자료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6일 산림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산사태 위험 1·2등급 지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이 238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245개소)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게 구 의원측 분석이다.

산림청은 전국 산림의 산사태 발생확률을 5등급으로 구분해 산사태 위험지도를 제작하며, 1·2등급이면 산사태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결국 산사태 발생 확률이 높은 곳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했다는 얘기다.

집중호우가 쏟아졌던 지난 8월 함평군 대동면 3000㎡ 규모 태양광시설의 경우 산사태 위험등급이 5등급인 지역인데도,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위험지역 내 태양광시설에 대한 보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산사태 고위험 지역에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실태 및 안전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급경사지 관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행안부의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라 '재해위험성이 없다'며 B등급으로 분류된 광주·전남 급경사지 5곳이 올해 집중호우 때 붕괴된 점 등을 지적했다.

행안부는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라 급경사지를 A~E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A 등급은 '재해 위험성이 없으나 예상치 못한 붕괴가 발생해도 피해가 미비'하고, B등급은 '재해 위험성이 없으나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다. D·E등급은 재해 위험성이 높아 정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재해위험성이 없는 지역조차 붕괴된 만큼 현재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이 의원측 지적이다.

이해식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빈도와 강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을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연휴 뒤 재활용 쓰레기 산더미 6일 광주시 북구 재활용선별장에서 직원들이 추석연휴기간 쏟아져 나온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품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전남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 여전

최근 3년간 12명 징계

광주·전남지역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총 12명이 징계를 받았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 및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서 9명, 전남에서 3명이 각각 징계를 받았다.

징계 유형은 해임 3명, 정직 1명, 감봉 1명, 견책 3명, 주의 2명, 기타(사직) 2명 등이다.

전국적으로는 총 161명이 징계를 받았다. 전국적으로 징계를 받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 유형별로는 폭력(성폭력 포함)이 96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수수 34명, 복무불성실 15명, 경비집행 부정행위 11명, 학습권 박탈 4명 등이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4·16진실버스' 출발 26일까지 전국 순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4·16진실버스'가 전국을 순회한다.

6일 4·16 재단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에서 출발한 4·16진실버스가 오는 10월 26일까지 21일 간의 전국 순회를 시작했다.

4·16진실버스 전국 순회는 전국 시민들을 만나며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국회 입법동의청원에 시민들의 참여를 요청하기 위함이다.

4·16진실버스는 수원, 대전 등을 거쳐 오는 14일 광주에 도착할 예정이며, 15일 진도 팽목항에 도착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도서출판 상상인

NEXT

상상인을 찾습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에서는 우수한 시집원고를 모집합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은 재능있는 시인들의 작품집 발간을 위해 우수한 시집원고를 수시 공모합니다. 접수받은 원고는 매분기 엄정한 심의를 거쳐 작품집으로 출간됩니다.

107인의 신춘문예 출신들의 상상(앤솔로지)을 시작으로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총 9권을 발간하였으며 발간 예정인 시집들도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집뿐만 아니라 평론집, 시조집, 동시집 등 다양한 작품집을 발간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도서출판 상상인은 문학사업의 일환으로 상상인 창작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우수한 시집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원고 보내실 곳 E-mail : ssaangin@hanmail.net
■ 모집원고 : 시집 한 권 분량(시 50편 이상)
■ 출간혜택 : 선인세 일백만원, 해설비 지급 등을 통하여 시집 제작. (필요시 저자는 정가의 70%에 구입)
■ 문 의 : 010-7371-1871

지금까지 출간된 상상인 시선

상상 (앤솔로지)
붉음이 제 몸을 휜다 김 유 석
오렌지 나무를 해답으로 칠게요 최 지 하
새, 블랙박스 양 수 덕
방울을 울리며 낙타가 온다 이 선 애
그녀의 외로움은 B형 -新 글러브 중독자 마 경 덕
사과상자의 이설 전 다 형
당신에게는 이르지 못했다 권 혁 재
메타자본세라이어 신전 강 대 선

* 7월 발간 예정
김남수 시집 - 둥근 것을 보면 아프다

* 8월 발간 예정
정영주 시집